

# 체제전환의 유형과 경제성과의 관계연구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미영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目次

- I. 서론
- II. 체제전환의 이론과 구조
- III.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성과
- III-1.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 모형과 경제 발전
- IV.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성과 : ‘우즈벡의 역설’
- IV-1.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 모형과 경제 발전
- V. 결론
- VI. 참고문헌

## 抄錄

본 논고는 중앙아시아에서 자주 비교되는 두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체제전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룩한 경제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의 역설’이라는 현상을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성장률이 ‘우즈벡의 역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재고찰 해보고자 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소연방 붕괴 이후 다소 다른 경제 발전 노선을 각각 걸어왔다. 외국 기업 및 투자에 대해 카자흐스탄은 개방적인 정책을, 우즈베키스탄은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양국 모두 훌륭한 성장률을 보였다. 외부에 개방을 하지 않았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성장한 이 현상에 대해 흔히 ‘우즈베키스탄의 역설’ 또는 ‘우즈베키스탄의 수수께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은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은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이 시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양국의 경제 비교분석을 통해 이 현상 및 표현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진정 우즈벡의 경제 성장을 ‘역설’ 또는 ‘수수께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 I. 서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면에서 자주 비교되는 중앙아시아의 두 국가이다. 구 소련이 붕괴한 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각자 다른 노선을 걸어왔다. 충격요법의 전형적인 사례로 불리는 카자흐스탄과 점진주의 정책을 채택한 우즈베키스탄은 각자의 노선에서 두 국가는 그들만의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일반적인 이론에 의하면,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외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펼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를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른다. 1992-2001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 실적은 구소련 공화국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 2001년 우즈베키스탄의 GDP는 1989년 수준을 3%상회함으로써 구소련 공화국 중 1989년의 수준을 최초로 뛰어넘은 국가가 되었다.<sup>1)</sup> 폐쇄적인 경제 정책 하에서 경제성장을 이룬 우즈베키스탄을 설명하는 용어인 ‘우즈벡의 역설’을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인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이후 많은 국가의 경제가 쇠퇴한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물론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증가해 온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성장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이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폈고, 우즈벡 경제가 외부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일 이 시기에 우즈벡의 경제도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하락세를 보였다면, 이전에 달성했던 우즈벡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역설’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우즈벡 경제 성장은 결국 ‘우즈벡의 역설’이 ‘역설’이 아닌 ‘논리’였음을 입증해준다.

이러한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도입부에 체제전환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 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성장을 분석할 것이다. 양국의 체제전환 모형과 초기조건을 제시한 뒤,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달성했던 양국의 경제 성과와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각각 비교 분석하면서 본 논고가 제시한 의문점을 파헤쳐보고자 한다.

## II. 체제전환의 이론과 구조

일찍이 구소련과 동유럽에서는 경제개혁의 속도 및 순서를 둘러싸고 이른바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접근방법 간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충격요법 모델의 근거에 있는 가정은, 가격자유화는 시장경제의 나머지 요소가 뒤따르도록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충격요법 모델에 따르면, 구조조정은 가격시스템의 자유화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가격시스템의 자유화는 태환가능 통화가 없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태환가능 통화는 경쟁이 없이는 정착될 수 없으며, 경쟁은 구조조정이 없이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충격요법론자들은 왜곡된 가격을 유지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과 지대 추구, 그리고 부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점진주의의 옹호자들은 경제를 즉각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조직을 파괴

1)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전략과 정책모델: ‘우즈벡의 역설’, 2009, P.7~8.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격 요법은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가득 차있다고 주장한다. 점진주의자들에 따르면, “자유화는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점진주의자들은 혁명적인 방법보다는 진화적인 방법에 더욱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충격요법론자들은 합리성과 편의성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변화를 지지한 반면, 점진주의자들은 경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 신중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한 접근을 선호했다. 이러한 양 접근과 더불어, 충격요법 모델과 점진주의 모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존재한다. 롤랜드(Roland)는 어떤 사람 혹은 국가에게는 빠른 것이 다른 사람 혹은 국가에게는 느린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모든 체제전환 국가들은 고유의 체제전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충격요법이나 점진주의라는 이분법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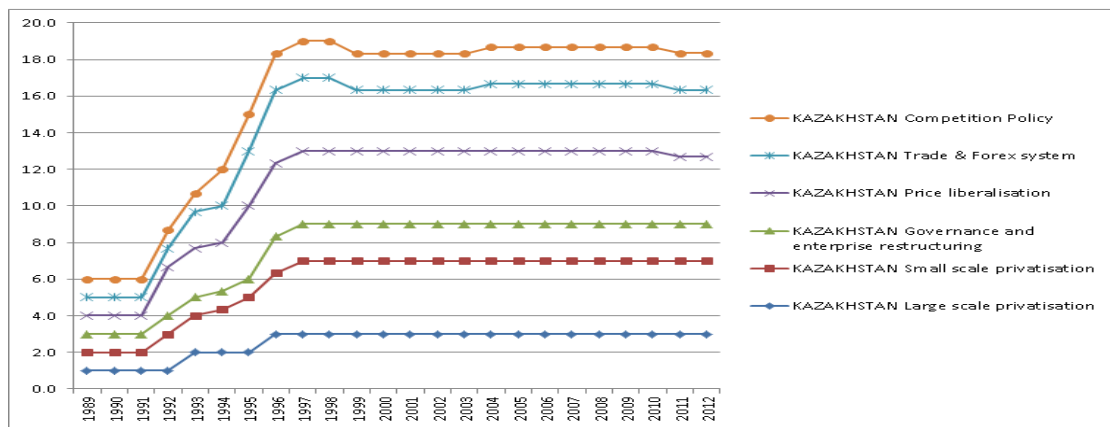
체제전환에 관한 많은 연구는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성장에 초기조건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더욱 동쪽에 위치한 국가(독일 뒤셀도르프를 기준으로)나 사회주의 하에서 더욱 오랫동안 지낸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더욱 나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초기조건에 대해서 고찰했는데, 전반적인 결론은 초기조건에 영행은 체제전환의 출발시점에는 강력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다. 초기조건에 역할 감소는 각종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초기조건 지수에 관한 계수는 거의 항상 작은 값을 보인다. 초기조건 지수가 ‘체제전환 기간’ 더미변수와 교호작용을 할 경우 그 계수는 마찬가지로 작은 값을 갖긴 하지만 마이너스 값으로 바뀐다. 즉, 체제전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초기조건에 중요성은 더욱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체제전환 지표로는 대규모사유화, 소규모사유화, 기업구조조정, 가격자유화, 무역 및 외환시스템, 경쟁정책 등이 있다. 제도적 전환에 기업사유화와 정부규제 정책 등이 포함되고, 무역 및 가격자유화가 자유화적 제도에 속한다.

### III.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성

#### 1.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 모형과 경제 발전



[그래프1]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 지표

\*자료 : EBRD

2) 김영진,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2009, P.107~112.

카자흐스탄은 체제전환에 있어 충격요법을 사용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의 국가이다. ‘가격자유화와 국유기업 사유화’라는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카자흐스탄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려 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을 살펴보자.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은 초기조건지수가 양호한 편에 속해있었다. 카자흐스탄은 구 소련방에서 주요 농업 생산국이었는데, 2억 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역은 곡물재배와 가축사육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 나타났던 공업의 집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농업은 계속하여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1991년, 농업은 국민소득의 34%를 차지하고, 공업은 37%를 차지했으며, 원료생산에 강하게 특화된 농공업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중공업은 주로 원료 및 중간 가공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에 따라 농산물도 대체로 1차 원료로 구성되어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이고 고도로 특화되어 있으며, 다른 기업과 복잡한 연결을 맺고 있다. 모든 기업은 기본적으로 각 시장에서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는 외국과의 운송연결이 취약하고 세계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국내에 제한된 시장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인구규모가 약 1700만 명으로 아주 작았고, 1인당 소득도 아주 낮은 편이었다.

수십 년 동안 소련방은 카자흐스탄 천연자원의 상당량을 이용했다. 이러한 일은 전적으로 소련방의 전체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탈적인 방식으로 행해졌다. 천연방 차원의 중앙부처와 행정조직은 최대한의 원료추출이라는 생산목표만을 중시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의 기본적인 수요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과 환경보호를 도외시 했다. 그 결과, 매장량이 풍부한 다수의 광상과 유정이 급속도로 고갈 되어 이용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소비에트 체제는 카자흐스탄에 초기 공정작업만을 할당하고, 그다음 단계의 원료는 공화국 외부의 최종목적지로 운송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거시경제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과제로 남게 되었다. 한편, 소련방의 분열은 고도로 통합되었던 전 연방 소비에트 시장의 붕괴를 의미했으며, 모든 신생독립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소련방 구성공화국들은 생산을 급격히 감축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소련방의 분열은 카자흐스탄에서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경기침체는 카자흐스탄이 원료생산에 매우 특화되어 있었고, 따라서 다른 재화를 여타 소비에트 공화국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직접 기인했다. 개혁의 개시 이후, 다른 공화국에서 공급된 재화의 양은 50~80%가 급감했으며, 그 요인만으로도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생산 하락폭의 30~35%를 차지했다.<sup>3)</sup>

[표1]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과 역사

	체제전환 착수시점 (T기)	1인당 소득 (PPP), 1989년	1인당 GDP(PPP) , T기	공산주의 시작	초기조건 지수 <sup>1)</sup>	민족분열 <sup>2)</sup>	천연자원
카자흐스 탄	1992	5,130	5,615	1921	-2.5	0.68	풍부

\*자료 : 김영진,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2009, P.111내용을 재작성.

주 : 1) 지수가 더욱 높은 수치를 가질수록 더욱 유리한 조건을 의미한다.

2) 범위는 0과 1의 사이에 위치하며, 0은 민족분열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3) 김영진,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2009, P.114~115.

상기에서 밝혔듯이,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전략은 가격자유화와 국영기업사유화라는 두 가지의 전략에 기초를 두었다. 그렇다면, 카자흐스탄이 실시한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카자흐스탄은 독립 직후 국가주도의 시장경제 활성화가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수출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이윤동기가 카자흐스탄의 계획경제를 자본주의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인 자본축적을 충족시키는 유인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조건들이 초기 경제정책인 전환적 자본축적인 사유화와 시장경제형성의 활성화를 위한 가격자유화로 나타나게 된다.<sup>4)</sup>

가격자유화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이유는 명확했다. 시장경제의 각 경제주체는 가격신호, 즉 재화와 서비스, 원료, 노동, 자본 외화 등의 상대가격 변화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계획체제 하에서의 가격은 행정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장에 따르면, ‘빅뱅’ 방식으로 일거에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효율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일정한 가정 하에서만 타당하다. 첫째로는 거시경제의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인플레이션율이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가격을 전반적인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투자자와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상대가격과 이윤인센티브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기가 곤란할 것이며, 따라서 가격체제는 자원배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나 공급의 반응이 커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격은 산출물 구성과 소비패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셋째로는 고용의 수준과 생산능력의 이용수준이 높아야한다. 상대 가격 변화에 대한 산출의 반응은 투자율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투자는 다시 경제활동의 템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으면 투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투자가 낮은 수준에 있다면 산출구성에서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불행히도, 카자흐스탄에는 가격자유화의 성공에 필요한 이들 조건 중 어느 것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독립 이전에 카자흐스탄은 소연방으로부터 대단히 많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는 정부의 총지출을 위한 재원 중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였다. 1980년대 말, 이 보조금은 GDP의 9% 이상에 상당하는 규모였다. 독립 이후 이 보조금은 갑자기 중단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직면했다. 이 상황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조세수입의 증가와 지출의 삭감을 통해 거시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기보다는, 화폐증발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을 택했다. 1992년과 1996년 사이에 정부지출은 GDP의 31.9%에서 17.2%로 하락한 반면, 조세 수입은 GDP의 21.5%에서 10.5%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가격자유화에 대한 낮은 공급 탄력성으로 인해 더욱 악화 되었다. 시장은 계획체제를 즉각 대체할 수 없었으며, 소연방 및 그 외 코메콘 국가와의 교역 메커니즘의 붕괴는 카자흐스탄에게 수출시자의 상실을 의미했다. 다른 시장으로 공급선을 급히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그 결과 산출이 하락하여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었다. 특히 국유 공업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계획체제 하에서 각 국유기업은 공급자 및 구매자와 밀접한 결합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중 다수는 소연방의 다른 공화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불황은 다시 투자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으며, 그것은 가격신호에 따라 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제의 능력을 더욱 축소시켰다.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전략이 기초한 두 번째 토대인 사유화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사실상,

4) 김중관,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 2006, P. 189.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유화 움직임의 대부분은 전체주의 국가 및 그 중앙 집권적 계획으로의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모로까지 정부통제부문을 축소하려는 동기에 의해 유발되었다.” 1992년 초 카자흐스탄의 사유화는 소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국가기업의 소유권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적 수준으로 넘어갔는데, 바우처, 경매, 직접매각, 주식매각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 실시된 사유화의 결과는 실망스러웠는데, 대중의 지지를 받지도 못했으며 성공적이지도 않았다.<sup>5)</sup>

카자흐스탄은 체제전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1990년대 전반기에 심각한 경기침체에 시달렸는데, 1991년과 1995년 사이에 GDP가 2/5 이상이나 하락했다. 1998년까지 하락세를 보인 GDP는 1999년에 보인 미약한 성장의 실적을 시발로 하여 마침내 거시경제 실적을 기록했다.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초기의 높은 소득과 인적 자본,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외부적 충격과 하이퍼인플레이션,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의 이민은 막대한 산출량의 축소를 가져왔다. 1990~1995년 사이에 국내 생산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되었으며 그 하락률은 이 시기의 첫 5년 동안 빠른 속도로 가속화 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2년 1월에 가격자유화를 신속하게 실시했지만,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 1997년에 들어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통제되긴 했지만, 1992-93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하락시키는 데서 지체한 것도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체제전환이 시작한 이래 3년간 네 자리수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으며, 최고조에 이른 1994년에 연간 인플레이션은 1.892%였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96년의 인플레이션을 두 자리 수로 하락시키고 마침내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가격자유화 시기와 동시에 진행되면서 효율적인 시장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 가능성을 파괴했다.

1990년대에 카자흐스탄 이민율은 상당히 높았다. 독립 시에 1,700만 명이었던 인구가 10년 후에 1,500만 명 이하로 하락했다. 체제전환국 간의 산출량 비교는 대개 1인당 GDP보다는 총산출량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민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실적 비교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1998년의 경기후퇴는 러시아의 위기에 뒤따른 것이었다.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외생적인 충격이었지만, 카자흐스탄이 쉽게 감염된 것은 그러한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견실한 시장경제를 창출하는 데 실패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큰 폭의 평가절하로 대응했는데, 그것은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1999년과 2000년에 경제흐름을 뒤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다.

[표2] 90년대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 실적 및 인구규모와 1인당 GDP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인플레이션 (CPI)	1,381. 0	1,662. 3	1,892. 0	176.3	39.1	17.4	7.1	8.3
실업(연말)	0.4	0.5	8.0	10.1	7.6	6.5	13.1	13.5
인구(백만 명)	16.9	16.9	16.2	16.0	15.7	15.5	15.2	14.9
1인당GDP(달러 )	349.6	331.0	735.7	1,042. 8	1,341. 9	1,431. 8	1,457. 5	1,13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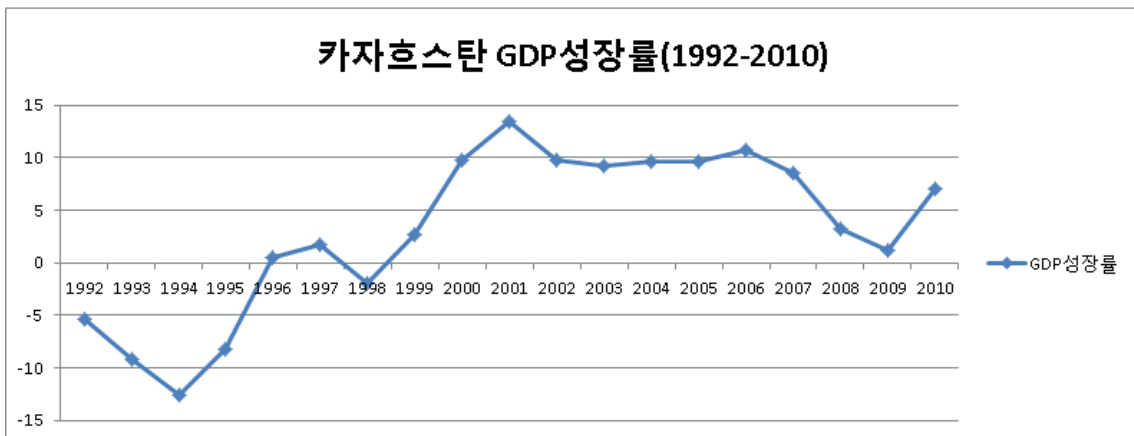
\*자료 : 김영진,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2009, P.119~120  
내용을 재작성. EBRD. Economy statistics and forecasts

5) 김영진,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2009, P.115~118.

카자흐스탄은 1999년에 경제흐름을 역전시키고 2000년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의 시기를 맞이 했는데, 이것은 국제석유가격의 상승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 5월, 정부는 경제의 체질강화와 금융적 강세를 보이는 신호로 IMF의 부채를 조기에 상환했다. 2000~2007년에 걸쳐 연평균 10%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표3] 카자흐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2000~2007) \*자료 : EBRD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소비자물가 (%)	13.2	8.4	5.9	6.4	6.9	7.6	8.6	10.8
실업률(%)	12.8	10.4	9.3	8.8	8.4	8.1	7.8	7.3
수출 (100만 달러)	9,288.1	8,927.8	10,026.9	13,232.6	20,603.1	28,300.6	38,762.0	48,349.0
수입 (100만달러)	7,119.7	7,944.4	8,039.8	9,553.6	13,817.7	17,978.8	24,120.0	33,208.0
무역수지 (100만달러)	2,168.4	983.4	1,987.1	3,679.0	6,785.4	10,321.8	14,642.0	15,141.0
FDI (100만달러)	1,278.2	2,860.6	2,163.8	2,213.4	5,436.0	2,123.0	6,630.0	7,100.0
환율 (대달러, 연말)	144.5	150.2	155.6	144.2	130.0	134.0	127.0	120.7
인구 (백만명)	14.9	14.9	14.9	15.0	15.1	15.1	15.1	15.1
1인당GDP (달러)	1,230.5	1,491.7	1,657.2	2,062.3	2,862.5	3,783.2	5,362.9	6,867.3



[그래프2] 카자흐스탄의 GDP성장률

\*자료: EBRD, Global Insight2011

체제전환 초기인 1994년 -23.6%로 최악의 경기 침체를 보인 카자흐스탄 경제는 2000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001년 13.5%, 2006년 10.7%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카자흐스탄 경제의 성장동력은 국제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출의 호조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 투자 및 소비의 건설한 증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생산은 2000~07년 기간 동안 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6년과 2007년의 총고정자본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24.0%와 18.6% 증가하였다. 그리고 민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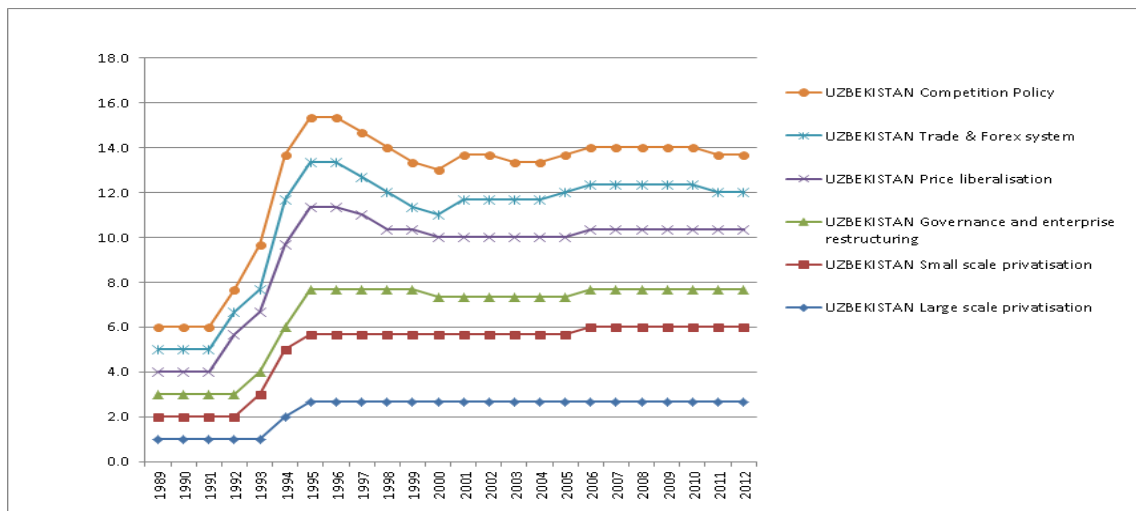
자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정부의 공공투자는 사회 및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다. 석유산업은 카자흐스탄 최대 산업으로, 2005년에 1일 124만 3천배럴에 총 6,190만 톤의 석유 및 가스 콘덴세이트를 생산하였다. 2000~05년까지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은 연평균 10~15% 증가해왔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 생산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로 2015년까지 석유 생산량을 일일 350만 배럴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요 원전으로는 카스피해 연안을 중심으로 텡기즈, 카라차가나크, 카샤간, 쿠르만가지 등이 있다.

1999년 이후 석유 붐은 석유 가경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경우에도 카자흐스탄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주된 우려의 하나는 제도적인 환경이다. 1994년에 정치적 다원주의가 잠시 번성하였으나, 1995~6년에는 연고자본주의로 전개되면서 1990년대 이래 카자흐스탄의 정치사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사유화 과정은 부패를 잉태하고 거버넌스 기준을 악화시킨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두번째 우려는 풍부한 석유자원의 역할이다. 석유는 2000년 이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을 뿐만아니라 확인 매장량은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 상당규모의 석유생산을 보장하고 있지만, 석유부문은 공적자원을 민간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대규모의 가장 부패한 부분이었다.

카자흐스탄은 2007년 중순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중앙아시아 국가가운데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미 2007년 8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07년의 최종적인 GDP 성장률은 8.5%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 걸친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2008년의 경우 GDP는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카자흐스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높은 국제석유가라는 유리한 대외적 여건이 사라진 조건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가 외부적 충격에 대단히 취약했기 때문이며, 그러한 취약한 경제구조는 1990년대에 도입되려 실시된 충격요법 모델에 기초한 체제전환 전략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IV.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성과 : ‘우즈백의 역설’

##### 1.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 모형과 경제 발전



[그래프3]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 지표

\*자료 : EBRD



우즈베키스탄의 중앙계획에 대한 경험은 70년 이상 지속되었다. 표4은 우즈베크의 초기조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인구면에서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1989년 2천만명을 넘었으며, 면적에서는 5위로 약 44만 7천km<sup>2</sup>의 면적을 갖고 있다. 우즈베크의 공업화는 구소련 공화국 중 가장 뒤떨어졌는데, 1990년의 공업생산은 총산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했을 뿐이며, 농업부문과 서비스 부문이 각각 3분의 1씩을 차지했다(ADB,2009).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업생산이 총산출에서 각각 48%, 44%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된다.

[표4] 우즈베크의 초기조건

	인구 (100만명) (1989)	중앙계획 기간	공업/GDP (%) (1990)	1인당 소득 <sup>1</sup> (1988)	빈곤인구 비율 <sup>2</sup> (%) (1989)	초기조건 지수 <sup>3</sup>	천연자원
우즈베키스 탄	20.3	71년	0.33	62	43.6	-2.8	중간

주1) 소연방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이다.

주2) 전체 인구 중 1인당 월 소득이 75주블 이하인 가구의 인구비율이다.

주3) 수치가 높을수록 더욱 유리한 초기조건을 의미한다.

자료 : IMF

우즈베크 경제는 농업생산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농업부문과 서비스 부문이 대부분의 고용기회를 제공했다. 경제 시스템 전체가 면화 생산을 중심으로 운영될 정도로 ‘흰색 금’이라 불린 면화는 줄곧 우즈베크에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었다. 우즈베크는 구소련에서 생산된 면직물의 61% 이상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 중 하나로 남아있다.

소비에트식 발전의 공통적인 정식, 즉 소비재보다 비소비재의 생산을 중시하는 사고는 우즈베크의 공업부문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공업생산에서 중공업 분야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경공업과 식료품가공업은 각각 36%, 14%를 차지했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의 공업 생산 잠재력은 여차 연방 구성 공화국에 비하면 대체로 자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그쳤다. 즉, 우즈베크에서 생산된 화학비료와 기계류는 대부분 자국의 농업 분야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구소련 구성공화국 간의 무역수지에서 우즈베크은 소비재, 기계류, 연료 분야에서 무역적자를, 농산물과 경공업 분야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초기조건 지수를 살펴보자. 더 큰 초기조건 지수를 가진 국가는 체제전환 시점에 더 유리한 조건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 지수는 발전 수준, 코메콘에 대한 무역의존도, 거시경제의 불안정(억압된 인플레이션, 암시장 프리미엄), EU와의 거리, 천연자원 부존량, 시장 경험 및 국가 역량에 관한 요소 분석에서 산출되었다. EBRD 초기조건 지수에 의해 측정된 경제의 왜곡 수준을 보면 중부유럽, 동부유럽보다 CIS 국가가 훨씬 높았으며, CIS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우즈베크은 세 번째로 중간정도의 초기지수 조건을 갖고 있었다.

소비에트 유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초기조건과 산업구조는 우즈베크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선택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었다. 첫째, 이 같은 초기조건과 산업구조는 우즈베크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의 수입의존도를 크게 높였는데, 이는 체제전환 초기의 수 년 동안 우즈베크 경제에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둘째, 천연자원의 부존과 주로 국내 사용을 위한 생산에 맞춰진 공업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대다수 구소련 공화국과 달리 외부의 충격에 잠재적으로 덜 취약하도록 만들었다. 사실상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중앙집권적인 경제 관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업화와 결합해 개혁 정책의 선택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체제전환기에 상대적으로 더욱 나은 실적을 시현하도록 만들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다양한 제도적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 거의 유사한 한가지 정책 패키지를 강력하게 제시한다. 해당 국가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경제발전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개도국이든 그 권고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각국의 정부는 대내외 경제관계를 자유화하고 정부의 자산을 사유화하며 안정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화는 긴축적인 금융정책을 추구하고 국가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규모와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조치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1년 말 우즈벡이 독립을 선언했을 당시 우즈벡은 페레스트로이카하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시장지향 개혁을 추진할 것을 공언했다. 우즈벡 당국은 어떤 경제 발전 모델을 선택할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체제전환에 대한 빅뱅접근이나 충격요법 접근을 받아 들일 수 없음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Karimov,1998). 이는 중앙집권적인 계획 방식을 즉각 폐기하고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통해 분권화된 관리를 옹호하는 ‘러시아 모델’은 우즈벡에서는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우즈벡 정책 결정자의 정책의제에는 러시아 모델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적 발전모델이 있었다. 수출지향 성장의 한국모델, 기업가적 활동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터키모델, 농업개혁에서 출발해 공업으로 확대하는 점진적인 개혁의 중국 모델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 가운데 어떤 모델도 본격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우즈벡이 1991년 9월 독립국가로 등장했을 때 IMF는 통상적인 워싱턴 컨센서스 권고를 신정부에 제시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상태에 있었으며 다른 신생 국가와 마찬가지로 체제 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우즈벡은 종래의 정책권고안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초기부터 분명히 드러냈는데, 결국에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점진적 체제 전환 전략을 채택했다. 우즈벡 정부는 주택과 소규모 기업을 신속하게 사유화하고 가격자유화 조치를 수년 동안 추진했지만 경제의 자원배분 및 국제경제 영역에서는 강력한 통제를 유지했다.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는 유예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실시되었는데 우즈벡 정부는 종종 공식적인 사유화가 진행된 후에 조차 대규모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유지했다. 우즈벡 정부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경로를 따르기보다는 국가가 주도하는 점진적인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전략을 따랐는데, 이 점진주의 전략을 경제발전에 대한 개발주의 국가 접근과 결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즈벡의 경제정책 모델은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 특징이 우즈벡 경제정책 모델의 모든 특징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즈벡 경제정책모델의 핵심을 나타낸다.

- 통화레짐 : 복수의 환율과 외환 통제 유지
- 무역레짐 : 다수의 생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유지
- 금융시스템 :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신용할당과 국영은행에 기초한 금융제도
- 기업에 대한 개입 : 공업과 농업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 산업 정책 : 특정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
- 수입대체 정책 :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수입원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상황에 대응해 시간을 달리하면서 실시되었다. 1992년부터 우즈벡 정부는 에너지와 곡물의 자급자족을 추구하기 위해 엄격한 중앙통제를 통해 국내의 석유매장지를 개발하고 토지이용을 다른 작물에서 곡물 재배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실시

했다. 이러한 목표는 1995년에 이르러 대체로 달성되었다.

1994~1995년에 우즈베크 정부는 대내외 자유화를 향한 중대한 변화에 착수했다. 당시 우즈베크는 워싱턴 컨센서스 접근으로의 이동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기성 차관을 제공하는 IMF 안정화 프로그램이 1994년에 채택되었고, 1995년에는 일부 무역자유화가 시작되었으며, 1996년 말에는 통화의 태환성을 받아들이는 조치가 약속되기도 했다. 1995년 초에 이르러서는 국내가격의 자유화 과정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었고 세계은행, EBRD, ADB에서 대규모 차관이 도입되었다. 만약 우즈베크가 이러한 경로를 계속 따랐다면 ‘우즈베크의 역설’이라 불리는 현상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 컨센서스로서의 접근은 1994~1995년에 걸쳐 짧은 기간 내에 끝났다.

1996년 면화 생산과 관련된 국내외 상화는 우즈베크 경제에 심한 압박을 가했다. 1992~1995년 동안 423만 톤과 394만 톤 사이에서 완만하게 변화했던 면화생산은 1996년에 335만 톤으로 급락해 전년 대비 15%나 감소했다. 동시에 면화의 세계시장가격은 15% 하락했다. 면화수출은 1994~1995년에 우즈베키스탄 외화수입의 IR 절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경제위기를 낳았다. 정부는 면화 부문에 대규모 대추를 감해하고 경제정책에 관한 경로를 역전시킴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대응했다.

1997년 1월 우즈베크 정부는 무역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동시에 복수의 환율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더욱 엄격해진 무역레짐과 통화레짐은 수입대체 전략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구축되었으며 경제 다각화와 면화 수출에 대한 의존 감소를 목표로 했다. 이 산업 정책 하에서 중점육성 부문은 유리한 환율로 외환을 확보해 수입 중간재를 구입할 수 있었던 반면, 지원대상이 아닌 부문은 상대적으로 환율이 불리했기에 외환확보에 나서야 했다. 선별된 특정부문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대외경쟁에서 보호되었으며 특히 면화 같은 부문은 자운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또한 우즈베크 정부는 중앙은행 및 국가 통제의 상업은행을 매개로 중점 육성부문에 값싼 신용을 제공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0년까지 우즈베크 경제의 비국가부문은 GDP의 72.6%, 고용의 76%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기업이든 공식적으로 사유화된 기업이든 간에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면화와 곡물생산에 대해서는 중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1998년의 법령은 외국인 주주가 지배지분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기업의 전략적 결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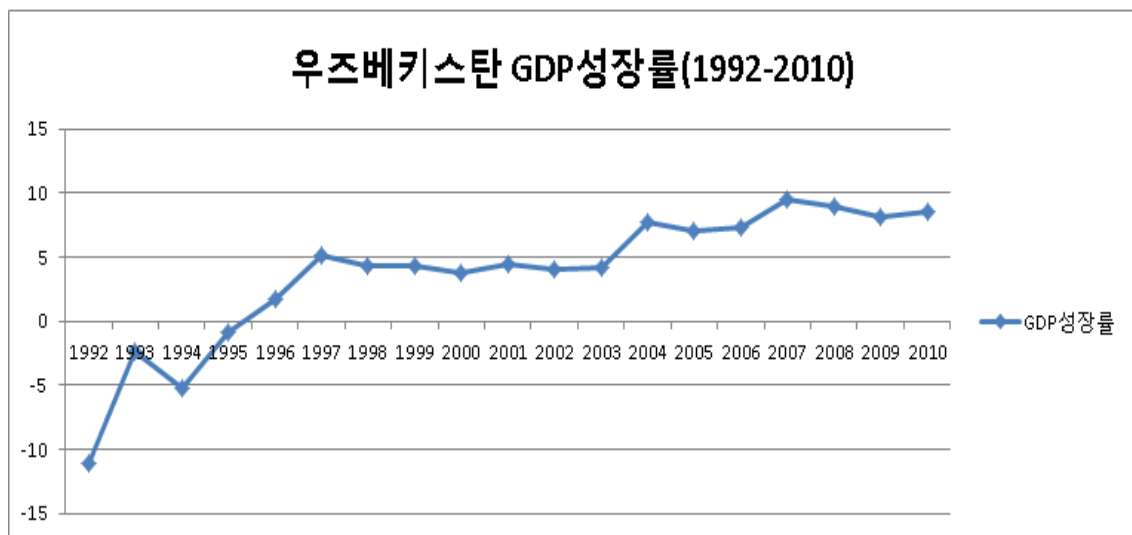
전체 산출의 70% 이상이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질 만큼 시장경제로의 중대한 전환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즈베크가 소비에트식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것이다. 우즈베크 경제는 불평등의 급속한 확대를 비롯해 여타 포스트소비에트 체제전환 경제가 고유하는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권고와 뚜렷이 대비되는 국가 주도의 체제전환과 발전전략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

외부의 관측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이 비정통적인 정책 때문에 취약한 경제실적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1992~2001년 동안 우즈베크의 경제성장 실적은 구소련 공화국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 체제전환 초기 우즈베크의 경제규모 축소는 구소련공화국 가운데 가장 완만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 1995년에 끝났다. 1996년 아래 GDP는 연평균 4%의 비율로 성장했으며, 1997년의 1인당 소비는 1993년의 수준을 약간(0.5%) 상회했다.

국가명	1989년 수준에 대한 상대적 크기
아르메니아	69
아제르바이잔	57
벨라루스	88
에스토니아	87
조지아	36
카자흐스탄	78
키르기스스탄	69
라트비아	69
리투아니아	69
몰도바	35
러시아	62
타지키스탄	52
투르크메니스탄	84
우크라이나	44
우즈베키스탄	103
CIS 평균	72

[표5] 구소련 15개국의 2001년 실질 GDP                      자료 : EBRD

표5에서 보듯 2001년 우즈베크의 GDP는 1989년 수준을 3% 상회함으로써 구소련 공화국 중 1989년의 수준을 최초로 뛰어넘은 국가가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01년 14개 다른 구소련 공화국은 1989년의 수준에 비해 35%(몰도바)에서 88%(벨라루스)에 이르는 GDP수준을 기록했다.



[그래프4] 우즈베키스탄의 GDP성장률

\*자료 : EBRD, Global Insight2011

[표6]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지표 (1992~200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물가상승률(%)	718.8	1042	1457	249.5	54.0	58.8	17.9	29.1	24.9	27.4
GDP대비 재정수지(%)	-18.3	-10.4	-6.1	-4.1	-7.3	-2.4	-3.0	-2.7	-1.2	-1.0
GDP대비 경상수지(%)	-12.0	-8.4	2.1	-0.2	-7.8	-5.4	-0.4	-2.0	2.8	-0.5

자료 : GDP 및 물가상승률은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는 EBRD

표6은 1992년 이래 우즈벡 경제실적의 네 가지 주요 지표를 보여준다.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도 소연방 붕괴 이후 대규모 경제 축소를 겪었는데, GDP는 1992~1995년 동안 누적해 18.4% 축소되었다. 하지만 이후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시기에는 26.2% 상승했다. 한편 1990년대 초 폭등하던 인플레이션은 1994년 정점에 도달한 후 1997년을 지나 연간 약 25% 수준으로 안정화될 때 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1992년에 GDP의 18.3%까지 치솟은 후 한 자릿수로 하락해 1996년 이후에는 GDP의 3%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경상수지 균형은 더욱 복잡한 경로를 따랐는데, 1992년에는 매우 큰 적자 규모를 보이다가 1994년에 소규모의 흑자를 나타냈고, 이후 1997년에 걸쳐 적자로 전환했다가 이후 균형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환했다.

전반적인 개혁 추진이라는 측면에서는 낮은평가를 받았지만 우즈벡은 거시경제실적의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사회보호전략을 내세우고 사회안정망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상당한 성공을 거뒀으며, 사회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분권화된 마할라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sup>6)</sup>

[표6] 우즈벡의 거시경제실적 지표 (2002~2008)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DP에서 공업의 비중(%)	14.5	15.8	17.5	20.7	22.1	25.0	-
GDP에서 농업의 비중(%)	30.1	28.6	26.4	25.0	24.1	21.7	-
1인당 GDP(달러)	333.1	386.5	474.4	567.5	630.8	814.8	1,007.4
소비자 물가(%)	21.6	7.8	9.1	12.3	11.4	11.9	14.4
재정수지 /GDP(%)	-1.9	0.1	1.2	2.8	6.8	5.7	10.2
수출 (100만달러)	2,510.2	3,240.0	4,302.1	4,594.3	5,377.1	7,691.5	10,490.9
수입 (100만달러)	2,186.4	2,404.9	3,060.4	3,305.3	4,007.3	5,798.0	7,211.4

6) 마할라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사회제도의 한 형태로서 마할라는 소비에트 시기보다 앞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무역수지 (100만달러 )	323.8	835.1	1,241.7	1,289.0	1,369.8	1,893.5	3,279.5
FDI (100만달러 )	65.3	70.4	176.6	191.6	173.8	705.2	754.6
외환보유고 (100만달러 )	1,302.0	1,659.0	2,320.3	2,992.6	3,778.4	5,193.8	8,758.2
대외부채 (100만달러 )	4,260.3	4,248.7	4,301.6	4,131.8	3,768.8	3,725.3	3,796.1
대외부채/ GDP(%)	44.1	43.7	37.3	31.3	22.1	16.7	13.6

\*자료 : EBRD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우즈베키스탄의 거시경제실적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4년 이래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도 외부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각각 9.6%, 9.0%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은 수입대체 정책과 산업 정책 등을 통해 주요 생산물에서 자급자족과 자립을 달성함으로써 우즈베크 경제가 외부의 충격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으로 최근 경제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한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와 비교되는 결과이다. 물가수준은 2003년 이해 흑자를 보이고 있고 무역수지도 안정기조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크는 상당한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우즈베크의 대외무역수지 흑자는 32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증가를 뒷받침했다. 우즈베키스탄의 GDP 대비 통 국가부채비율은 2008년 말 현재 13.6%에 지나지 않은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부채뿐 아니라 은행과 기업 및 여타 비즈니스 단위의 부채에도 포함하는 것이다. CIS 국가의 대외부채에 관한 수치를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즈베크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의 경험이 내포하는 독특하고 고유한 성격은 몇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풍부한 천연자원 부존을 보유하면서 주로 국내 사용을 위한 재화를 생산하도록 산업을 조정한 것이 우즈베크의 경제를 외부의 충격에 잠재적으로 덜 취약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이 자원이 풍부한 인접 국가는 직접적인 수출루트의 부재로 에너지 제품의 수출 잠재력이 제약된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주력 수출상품인 금과 면화는 대체로 수출이 용이했으므로 막대한 수출 수입을 향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초기조건을 전제하면 경제에 대해 중앙집권적인 관리를 한 것이 경제의 모든 핵심 부문에서 생산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sup>7)</sup>

7)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경제성장의 역설?', 2009.

## V. 결론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즈베키스탄은 체제전환에 관련된 워싱턴 컨센서스의 강력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포함한 자국의 초기조건에 근거해 점진주의 접근의 체제 전환 전략을 채택하면서 고유한 경제정책모형을 발전시켜왔다. 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즈베크의 경제성장 실적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 정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하여금 체제전환 이전의 GDP규모에 가장먼저 도달하고 2000년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IMF를 비롯한 국제기관에서 지칭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역설’, ‘우즈베키스탄의 수수께끼’는 알맞지 않은 표현일 것이다.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벗어난 정책모형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은 역설이나 수수께끼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 가능한 정책과 그 성과의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제전환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카자흐스탄은 2008년 글로벌 세계경제위기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외부경제에 대한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낸 반면 우즈베크는 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점진주의 접근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체제전환 초기에 산출의 극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경제의 중앙집권화된 관리를 비롯해 우즈베크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경제구조, 풍부한 천연자원 부존, 수출 수입의 획득 가능성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개혁전략의 선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력한 경제 회복세도 설명해준다. 이 시기에 채택된 정책은 우즈베크가 2001년까지 체제전환 이전의 산출 수준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석유·천연가스·밀을 비롯한 대다수 소비재의 자급자족을 가능케 했다. 정부지출의 성격과 나아가 이들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교육과 의료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출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중관, ‘우즈베키스탄 시장의 환경평가와 경제교류 전략의 방향성 분석’, 2010.
- 김영진, ‘유라시아 국가의 권위주의와 경제발전 : 민주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2010.
- 김영진,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2009.
-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전략과 정책모델 : ‘우즈벡의 역설’’, 2009.
-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경제성장의 역설?’, 2009.
- 한종만, ‘CIS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현황과 경제전망’, 2007.
- 김중관,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 2006.